

“FTA 겁나네”... 산지소·돼지값 ↓

축산농가 불안심리 고조... 헐값에 출하 FTA 타결후 암소 최고 40만원 떨어져

지난 2일 한미 FTA 타결 이후 축산농가들의 불안심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물 가격이 동반하락하고 있다. 더욱이 전국 한우 거래시장에서는 산지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거래 성사율도 크게 낮아져 가격폭락 현실화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는 추세다.

농협중앙회의 가격정보에 따르면 6일 현재 암소(600kg) 가격은 507만원으로 한미 FTA 체결 직전이었던 지난달 30일(528만9천원)보다 21만원 이상 하락했다. 암송아지와 수송아지도 각각 17만4천원, 16만3천원 하락한 241만2천원, 203만3천원에 머물렀다.

전남지역 우시장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강진시장에서 암소(500kg)의 경우 지난달 30일 460만원에서 이달 6일 420만원으로 40만원 떨어졌다. 같은 기간 거래성사율도 100%(20/20마리)에서 68%(27/

40마리)로 크게 줄었다. 순천시장에서 암소(400kg) 거래가는 392만~370만원으로 하락했고, 거래성사율도 68%(13/19마리)→47%(9/19마리)로 떨어졌다. 생후 4~개월 된 송아지 가격도 마리당 15만~20만원의 감축폭을 보였다. 고흥시장 거래가는 240만→220만원, 거래건수는 92마리→79마리로 줄었다. 또 화순시장 거래가는 235만~220만원, 거래건수는 101마리→64마리로 뚝 떨어졌다.

농협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소값이 떨어진다든 불안심리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출하를 서두르고 있어 거래성사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조만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돼지값도 심상치 않다. 한미 FTA 타결로 인해 소값하락과 함께 쇠고기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체재인 돼지값도 덩달아

■ 한미 FTA 협상 타결 전후 가격추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100kg기준 21만4천원이었던 돼지의 경우 한미 FTA 체결직전인 2일 21만9천원으로 상승세를 보였지만 체결 이후 1천원 하락한 21만8천원대를 형성했다.

강진군에서 한우 5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K모(49)씨는 “한미 FTA 체결이후 헐값에 소를 출하하고 인식을 머뭇거리는 농가들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반면 국제곡물가가 오르면서 사료값은 일주일새 6.4%나 오른 상태여서 이따가가는 소농사를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걱정했다.

한미 FTA 체결로 현행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40%의 관세가 15년

에 걸쳐 2.67%로 감축되고 올해부터 수입이 재개되면 도내 한우농가들의 생산감소액은 연간 34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2006년 기준 전국 한우사육 두수 202만마리 가운데 15.2%(30만8천마리)를 점유하고 있는 전남은 1년 전인 2005년 27만 5천마리보다 12%(3만3천마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피해가 더욱 커지게 됐다.

여기에도 오는 7월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 산지 소값도 더 떨어져 축산농가의 피해를 부채질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자금 ‘묻지마 투자?’

인천 송도오피스텔 청약 8,000명이나 몰려

사상 최고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코오롱 ‘더 프라우’ 오피스텔 청약에는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의 남녀 노소가 ‘묻지마 투자’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번 청약에는 지방 주택경기 침체 여파로 광주·전남에서만 8천여 명이 청약하는 등 지방 수요자들이 대거 몰리며서 지난해 말 수도권외의 ‘집값 광풍’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9일 코오롱건설에 따르면 은행 창구를 통한 ‘더 프라우’ 청약 건수 29만 4천458건 가운데 8천6건이 광주·전남에서 접수됐다.

이는 전체 청약의 2.7% 수준으로,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급증하고 분양가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는 아파트가 속출하자 지역 투자자들이 수도권의 오피스텔로 투자처를 물리

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남의 경우 4천498건이 접수돼 광주(3천508건)를 크게 웃돌았다. 또 전북(5천41건)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의 4.4%(1만3천47건)에 달할 만큼 호남권의 청약 열기가 두드러졌다. 전체 청약자 25명중 1명이 호남권 투자자인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1.8%(9만3천781건)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27.9%(8만2천300건), 인천 24.0%(7만704건) 등으로 서울·수도권이 전체의 83.7%를 차지했다.

지방은 전체의 16.3%를 차지한 가운데 ▲전북(1.71%) ▲충남(1.69%) ▲경북(1.68%) ▲전남(1.5%) ▲광주(1.2%) ▲강원(1.2%) ▲제주(0.2%) 등 16개 시·도 거주자가 모두 청약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전체의 35.6%로 가장 많았으며, ▲40대(31.5%) ▲



50대(14.0%) ▲20대(13.6%) 등의 순이었다. 30~40대가 청약에 대거 나선 것은 시세차익을 노린 직장인들이 적금을 꺼거나 급전을 마련해 청약할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돈이 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직장인과 주부들이 대거 청약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더 프라우’ 신드롬은 ‘풍선효과’의 전형이라는 입장이 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주 등 혁신도시 수용 토지 돈 대신 땅으로 보상 받는다

10개 혁신도시 건설로 인해 땅을 수용당하는 토지소유자들이 보상비의 일부를 ‘개발 이후의 땅’으로 보상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대구, 울산 등 대토(代土)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보상에 착수하는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땅으로 보상을 하는 ‘묘수’가 강구되고 있다.

9일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지구지정이 완료된 10

개 혁신도시의 토지소유자들이 희망할 경우 대토보상을 해 줄 방침이다. 대토보상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을 해 줄 때 현금이나 ‘개발 이후의 땅’으로 해 주는 것으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

정부는 6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공포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7월 이후에 보상에 들어가는 경우

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대토보상이 시행되기 전에 보상에 착수해야 하는 대구, 울산 등 2개 혁신도시인데 건교부는 이들 도시에 대해서도 대토보상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보상공고’에 단서를 달아 법이 시행되면 협의를 통해 땅으로 보상을 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보상을 해 줄 때 현금이 아니라 ‘개발 이후의 땅’으로 해 주는 것으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

정부는 6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공포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7월 이후에 보상에 들어가는 경우

광고에 웬 낙서?

아! 누군가 신문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모양이군요?
어느 잠소에서나 소비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그리고 자세히 읽어보게 되는 신문광고 -
그래도 궁금한 건 전화해서 물어보기까지 하잖아요.
소비자를 설득하는데 신문광고만 한 게 또 있을까요?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닭살 커플데이’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용순)는 젊은이들이 데이트를 시작하는 날을 맞아 ‘만남 기념일’로 자축하고 있는 데에 착안, 올해의 100번째 날인 9일을 ‘닭살 커플데이’로 정하고 순천대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닭고기 소비촉진행사를 가졌다. (농협전남본부제공)

농어촌지역 30% 보육시설 없다

농촌지역 1천여개 읍·면 가운데 3분의 1에는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등 농어촌 보육시설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9일 과천시사 회의실에서 여성농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방안’ 연구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농림부로부터 운영을 받은 육아개발센터는 농어촌 보육시설 설치현황,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소개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작년 6월 현재 농어촌 소재 보육시설은 모두 4천 149개로, 이 가운데 250개(14.4%)는 국공립, 578개가 법인 보육시설이다.

그러나 농촌 지역 1천417개 읍·면 중 2개 읍과 474개 면에는 보육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다.

또 화순군과 경북 의성군 3개면에서는 아동 261명 대상 조사에서는 17%가 보육시설에 가기 위해 편도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대담했고, 길게는 1시간30분을 차로 이동하는 아동도 있었다.

센터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교육·상담·노인정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센터 형태의 농어촌 지역 복합 시설 설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국공립 보육시설 연계, 가정보육도우미 제도 시행 등을 제안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은행서도 무역기금 지원

이젠 광주은행에서도 무역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은행은 “광주·부산은행 등 6개 지방은행과 한국무역협회 등이 최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수출중소기업 무역기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무역기금은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종전의 무역진흥기금과 해외시장개척기금을 합쳐 지난 2004년부터 조성한 것으로 시중은행을 통해서만 지원돼 왔으나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방은행에서도 취급하게 됐다.

이 기금은 해외 시장개척 기업이나 연간 수출 1천만달러 이하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지원되며 용자는 지방소재 기업의 경우 최고 4억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연 4.0% 확정금리가 적용된다.

장필수기자 bungy@

중소기업 기술개발 희망자 30일까지 모집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춘근)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산·산(産·産)협력 공동 기술개발사업 희망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산·산협력 공동기술

개발사업은 최근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는 기술의 추세를 반영해, 융·복합화·협력개발을 통한 위험분산, 개발기간 단축, 신기술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중 BI(창업보육센터)창업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은 BI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2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3억원까지 지원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